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계몽이란 스스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한 계몽의 정의다. 이에 따르면 계몽은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미성숙을 극복하는 힘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성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이 있는 사람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체의 각성을 강조하는 것은 계몽을 통해서 성숙한 사회,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자아가 확립되면 과연 ‘더 인간적인 상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재 모습을 둘러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이 과거보다 더 계몽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계몽의 결과는 더 많은 정보,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삶의 편리함이라는 과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에게 개방되는 기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이 되도록 한다. 주체적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주체

계몽의 역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은 현대 사회의 미덕이다. 하지만 주체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과연 인간적 가치가 더 실현될 것인가?

이성의 힘으로 원시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된 개인’은 분명 전보다 더 똑똑해졌지만 그렇다고 더 행복해졌는가? 주체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계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독일 나치의 파시즘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아돌프 노와 호르크하이머라는 두 철학자에게서 들 수 있다.

이 두 철학자는 칸트식의 계몽적 이성의 주의를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폭력적인 ‘야만’에 빠지게 했다고 말한다. 두 철학자에 따르면 주체적 이성만을 강조하는 계몽은 이미 자기 안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퇴보의 씨’를 품고 있다. 바로 이성의 독단이다.

내재된 퇴보의 씨는 계몽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내부에 숨겨진 계몽의 아만성을 폭로한다. 계몽적 이성은 자신이 아는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으로 나누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미성숙의 상태를 교정하려고 한다. 즉 자신만이 옳다는 독단에 빠진 계몽적 이성은 자기와 다른 것을 끊임없이 계몽하려고 하면서 자신과 같아질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것은 곧 ‘잘못된 것’ 내지는 ‘악한 것’이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계몽의 결과는 처음 계획했던 인간의 해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배 방식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두 철학자가 비판하는 계몽의 파괴성과 이성의 독단을 우리는 일상적 현실 속에서 자주 경험한다. 분명히 계몽은 개인이 전통적 가치로부터 해방되어서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주인이 된 개인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면서 진보의 의미는 왜곡되기 시작한다. 지식을 통해서 지배하는 힘을 얻은 개인은 이데타산에 뛰어나며, 정신세계와 진지함에 대한 비웃음과 성공을 위한 계산에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계몽된 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숭배 대상을 찾아내고 양(量)을 위해서 질(質)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오심 보 백 보’이므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에 이른다. 그리고는 세상은 더 나은 것도, 큰 차이도 없다는 이유에서 크고 작은 중요한 차이를 말살하고 그 위에 왜곡된 평등의 의미를 덮어씌운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의 독단은 중국어에는 자신마저도 파괴한다.

이성의 독단이 꼭 사회적인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과잉의 자아의식만 있을 뿐 자기반성이 없이 지나치게 ‘계몽된 개인’들이 곳곳에 적지 않다. 아주 작은 일에도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참거나 양

보하는 것은 무능함으로 생각한다. 매사에 ‘계몽’이 잘 된 탓에 분석하고 따져 보며, 합리화하면서 이성을 도구화한다.

이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전체적인 상황의 개선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몽’이 좀 덜 되었더라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개인과 개인이 살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늘 같고 더 좋은 방법이 아득 없지 않은가? 소통이야말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소통은 계몽된 이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싫든 좋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고민에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화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득 없지 않은가? 소통이야말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소통은 계몽된 이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성의 힘을 소통이 아니고 지배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성은 ‘인간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타자는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까지 파괴하는 야만과 폭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성적 소통의 최종 목적지는 상호 이해를 넘어서 실득과 승복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는 크고 작은 모든 관계에서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독단적 이성에서 과감하게 ‘계몽’되어야 할 때다.

법조칼럼



강 정 연
광주가정법원 판사

“저 여자는 아이 만날 자격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종일 울면서 엄마를 찾고 불안해해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만나면 안 될까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4세 자녀를 양육 중인 한 아빠의 하소연이다. 엄마의 부정 행위가 발각되자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 분가에서 양육하고 있다. 중앙육자이던 엄마는 아빠의 방해로 아이를 보지 못하다가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세 달 만에 아이를 만났던 사례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엄마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을까? 아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볼 때까지 엄마를 만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제9조는 아동은

자녀의 면접교섭권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면접교섭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 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부모의 면접교섭권만이 규정돼 있다가 2007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엄마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엄마와 헤어지기를 힘들어하는 자녀는 지금부터 엄마와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며 현상항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가 엄마와 만나지 못한다면 아이는 애착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애착 대상과 단절돼 큰 상실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미움으로 바꿔 엄마를 원망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 면접교섭의 단절로 어린 시절엔 엄마를 만나지 못하다가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해가는 시기인 청소년기가 돼서야

엄마를 만난다면 그 아이는 과연 엄마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혼과정에서 자녀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에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상대방과 영원히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다. 자신의 분노감정에 사로잡혀 부모의 다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혼 이후 자녀가 부모 모두와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부모는 그러한 자녀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이혼에 자녀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이혼 과정, 이혼 이후의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협담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일정을 잘 지키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며 양육비를 잘 지급해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별거를 시작하면 면접교섭 일정과 양육비에 관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이혼 과정에 있어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전처분’ 제도는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관하여 임시로 정해주는 제도다.

또한 광주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장기간의 별거로 자녀가 비양육자를 낯설어하는 경우에 위 센터에서 적절한 상담을 받고 한 달에 1~2회가량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이혼 절차 초기에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해 적절히 정해지면 자녀의 복리개선에 도움이 되고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갈등이 줄어들어 건강한 이혼에도 도움이 된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남이 된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혼인 중과 마찬가지로 한 아이의 부모이고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혼 이후 부모와 단절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이혼 이후에도 부모 모두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한다.

기 고

허철선 선교사 소천에 부쳐



홍 인 하
THE1904 대표·국제학박사

‘광주사랑’에 헌신적이었던 허철선 선교사가 지난날 2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추모 예배는 9일 수피아 여고 유진벨 기념예배당, 커티스 메모리얼에서 엄수됐다. 빈소는 허철선 선교사 사택 2층이었다.

그의 광주 사랑이 지고지순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그에 대해 아는 이가 별로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립등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빛도 이름도 명에도 없이 일했던 것처럼 허철선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연인지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날

(1934년 6월 26일) 소천했다. 서서평 선교사 역시 광주시민장례식까지 치렀음에도 그가 광주에 온지 100년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다. 허철선 선교사 역시 생전에 그를 기억하고 찾는 이가 별로 없었다. 필자는 고 때 ‘먼데이 미팅’에서 영어 성경을 공부하며 허철선 선교사 사택을 드나들었고 지금은 선교사들이 남긴 유업을 잇고자하는 사람들이 허철선 사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

허철선 선교사는 미국인으로 본래 이름은 헛트리(Charles Betts Huntley)이다. 1936년 미국에서 태어나 결혼한 후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왔다. 1965년 9월 부인 허마르다(Mrs. Martha L. Huntley)와 딸 메리(Mary Lanier)와 함께 한국에 왔다.

허철선 선교사의 부인 허마르다는 콜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미국학을 공부한 후 신문기자로서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며 저술가인 해리 골든(Harry Golden)의 연구원으로 활동한 저술가이다.

부부는 처음 한국에 도착한 후 2년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1969년부터는 광주 선교부에서 1984년 귀국할 때까지 일했다. 허철선 선교사는 1976~1984년까지 약 8년간 광주 기독교병원 제6대 원목실장으로 동시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국이름 헛트리를 얘기할 때 “전 헛트니 목사입니다. 새 틀 니가 아니고요”라고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부인 허마르다 선교사는 광주의 젊은 이들을 위한 영어 성경 공부반을 열었고, 선교 첫해인 1969년부터 떠나는 해인 1984년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영어 성경 공부를 했다. 당시 수피아여고 1학년이었던 필자도 다녔다. 또한 허마르다 선교사는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와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미국 남장로교회 월간지 등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출판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다. 가장 결

정적인 이유는 광주 5·18 때 이들 부부의 활동 때문이다. 1980년 5·18의 역사적 현장 한복판에 있던 이들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자출신이었던 허마르다와 부부는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5·18의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섰다. 이들 부부가 찍은 5·18의 사진은, 비밀리에 허철선 선교사 사택 지하 암실에서 인화되었다. 이 자료들은 거짓 보도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허철선 선교사가 5·18의 사진을 인화했던 암실은 아직도 그의 사택에 남아있다. 그럼에도 광주는 그에 대해 알리고 하지 않았다. 다행히 올해 오월어머니집에서 오월어머니 대상을 받아 기뻐했고 가족여행을 하고 환한 모습으로 소천했다고 한다.

허철선 선교사 부부는 예수그리스도 복음과 그것이 담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빛을 함께 밝히려 노력한 우리의 좋은 친구다. 광주의 오월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오월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다.

社 說

지방분권 개헌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재정과 사무의 이양을 추진해 왔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2할 자치’ 수준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도 72대 28로 3월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정책의 집행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불멘소리가 오는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사무를 이양해 주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점이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 짜놓은 틀에 맞춰 무한 경쟁을 벌이는 구조다. 이는 되레 중앙정권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 안에서 지역의 경제 구조나 특성을 고려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

프라가 취약한 광주·전남은 이 경쟁에서도 불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 균형 발전도 공영불에 그치고 있다. 남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고도(高度) 비만’으로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 일극(一極) 집중 구조에서 지방은 영양실조로 활기를 잃어 흘러서기는 엄감생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막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과감하게 넘기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

문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비견되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대학 등이 연합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예고돼 있는 지금이 ‘서울공화국’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개발, 공공성 강화 기준 만들어야

도시공원을 보존하지는 시민의 복수리에 있어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뜻을 함께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9개 환경·마을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10개 민간공원 개발 사업(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 검토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우선 민간공원 4곳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나머지 21개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이 담보된 적정 수준의 민간공원 개발을 위해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술세권’으로 불리는 공원 안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경제성 때문에 전국의 1군 건설업체에서부터 신탁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업체들이 수익금 중 일부로 공원을 조성한다고는 하지

만 일단 고층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데 지중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대상인 수광·마루·송암·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에 의향을 낸 업체가 무려 96개사(중복 제안 포함)나 되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우선 정책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도시 공원 개발이 건설업자의 이권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허파이자 산타인 도시 공원 보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광주 시장이 직접 나서서 행정과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영이 함께 공원 개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공원 개발을 위한 별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문 대통령과 저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 책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인데 꼭 다 읽는다. 그것이 책을 준 사람과 그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날 ‘2017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대통령 내외의 독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독서와 책에 대한 관점인 듯 하다. 물론 소통과 리더십, 겸손과 같은 기본적인 자질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미숙

김지영’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통령이 독서기인 데다 알고고로 상징되는 21세기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8년을 버틴 힘은 자기 전 1시간의 독서”라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독서는 각종 보고서와 정책 문건에 압도당한 대통령의 두뇌에 ‘기어’를 바꿔 주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구현했던 정조는 일찍이 도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다. 규장각 신하들과 나눈 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했다”로 요약된다. 문화 융성이라는 그럴듯한 가치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블랙리스트’로 편 가르기를 자행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일련의 불행은 한마디로 인문학의 부재와 사유의 빈곤에서 비롯됐다.

최근 출판문화협회가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한 추천 도서와 정책 제안으로 대통령에게 ‘서재전’도 오론했다. 추천 도서 목록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미국의 반지성주의’, ‘82년생

대통령의 서재

이론 독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다. 규장각 신하들과 나눈 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했다”로 요약된다. 문화 융성이라는 그럴듯한 가치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블랙리스트’로 편 가르기를 자행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일련의 불행은 한마디로 인문학의 부재와 사유의 빈곤에서 비롯됐다.

최근 출판문화협회가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한 추천 도서와 정책 제안으로 대통령에게 ‘서재전’도 오론했다. 추천 도서 목록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미국의 반지성주의’, ‘82년생

김지영’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통령이 독서기인 데다 알고고로 상징되는 21세기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8년을 버틴 힘은 자기 전 1시간의 독서”라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독서는 각종 보고서와 정책 문건에 압도당한 대통령의 두뇌에 ‘기어’를 바꿔 주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구현했던 정조는 일찍이 도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다. 규장각 신하들과 나눈 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했다”로 요약된다. 문화 융성이라는 그럴듯한 가치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블랙리스트’로 편 가르기를 자행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일련의 불행은 한마디로 인문학의 부재와 사유의 빈곤에서 비롯됐다.

최근 출판문화협회가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한 추천 도서와 정책 제안으로 대통령에게 ‘서재전’도 오론했다. 추천 도서 목록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미국의 반지성주의’, ‘82년생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